

국정목표 1

-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

추진전략 1	13
창조경제 생태계 조성	
추진전략 2	25
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강화	
추진전략 3	35
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	
추진전략 4	43
창의와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	
추진전략 5	49
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	
추진전략 6	57
성장을 뒷받침 하는 경제운영	

- (1)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 산업 육성
- (2) IT·SW 융합을 통한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
- (3) 산·학·연·지역 연계를 통한 창조산업 생태계 조성
- (4) 서비스 산업 전략적 육성기반 구축
- (5) 자본시장제도 선진화
- (6) 협력적 기업생태계 조성
- (7) 세계 최고의 인터넷 생태계 조성
- (8) 청년 친화적 일자리 확충기반 조성
- (9) 고용친화적 정부정책을 위한 고용영향평가제 강화
- (10)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로 따뜻한 성장 도모

가. 과제개요

- 과학기술의 책임과 역할을 확장하여, 新산업을 창출하고 사회 이슈를 해결하는 등 국민행복에 실질적으로 기여

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과학기술정책 패러다임 전환) 기술·지식 확보가 목표인 현재의 분절형 R&D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통섭하는 「생태계 창조형 R&D」로 변경

* 연구개발 또는 기존 기술의 발굴, 글로벌 시장개척을 위한 인프라, 제도개선·규제완화, 공공구매 연계 등까지 포함

- ② 과학기술과 아이디어·상상력을 융합한 신산업 창출

- (신성장동력) 과학기술에 기반한 미래예측으로 유망 성장동력을 발굴하고, 문화컨텐츠·SW·인문·예술과 융합
- (사회이슈해결) 고령화·에너지 등의 국가당면 이슈를 해결하고, 사회복지·안전 등 공공시스템과 연계한 新시장 창출 지원
- (실용기술 활용) 사업화창업 아이디어와 기술 보유자, 투자자를 매칭하고, 제품화를 위한 후속 R&D와 공공구매 연계 등 지원
- (과학기술 서비스) 빅데이터·초고성능컴퓨팅 등을 활용한 공공·민간 서비스 확대와 이를 통한 서비스산업 육성 등
- (거대·전략기술 기반산업) 우주발사체·인공위성, 대형 가속기, 원자력 등 대형 국가프로젝트 민간 개방으로 산업생태계 구축

- ③ (과학기술 국제화) 과학기술을 활용한 자원외교, 과학기술 ODA 등을 통한 과학한류와 해외일자리 창출

- 지구촌 기술나눔 센터(국내)와 적정과학기술 거점센터(현지)를 구축, 수익창출이 가능한 지역개발사업으로 연결

가. 과제개요

- IT,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성장정체에 직면한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산업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

* 제조경쟁력(美 경쟁력委, 位): ('10) 3 → ('12) 6

- 유망 융합신산업을 발굴·육성하는 한편 업종간 융합 성공모델 (수익모델) 확산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모멘텀과 일자리 창출 추진

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경제성장을 주도해 온 주력산업이 새로운 시장과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창의성과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융합형 성장 환경을 조성
 - 기존 지식서비스 관련 연구소·지원기관들의 기능을 강화하고 연계·조정함으로써, ‘지식+제조업’ 융합의 본격 확산 지원
 - R&BD 전주기에 걸쳐 디자이너, 스마트콘텐츠 전문가 등이 참여토록 ‘산업기술 R&D 기획·평가 체제’를 개편
 - 다양한 기업·전문가들이 직접 참여·소통하여 융합 성공모델을 창출하는 ‘산업융합포럼(‘12.12월 창립)’을 활성화하고 성공적인 수익모델을 발굴·확산
- ② 소재·부품, 뿌리산업분야(중소·중견기업 중심)의 융합 확산을 위해 시스템반도체(전력반도체)·첨단센서 등 차세대 HW 기술개발 및 나노소재, SW융합 부품 등 시장선도형 ‘핵심 소재·부품’ 개발
 - 소재·부품기업 대상으로 SW적인 경영진단, 공정혁신, 마케팅 전략 등을 제공하여 뿌리산업의 작업환경 고도화 추진
- ③ 항공전자, 랜딩기어 등 항공산업 핵심부품 기술개발·인프라 구축 및 C(탄소)-소재의 독자 기술력·생산능력 확보 → 신산업 창출

가. 과제개요

- ☐ 지역 대학·산업·연구소와 지자체를 과학기술을 매개로 하는 융합 공동체로 육성하고, 창업과 신산업 창출의 생태계 조성

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산·학·연 협력 패러다임을 「창업과 신산업 창출」로 전환
 - 산·학·연협력 총괄기구로서 대학 산·학·연협력단의 기능 정상화를 위해 기능재편과 전문인력(변리사 등) 충원 지원 확대
 -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이 창업으로 이어지는 대학 창업생태계 조성
 - 교수, 출연(연) 연구원의 기술창업·기술이전 활성화 지원
- ② 출연(연)은 산·학 협력 매개와 중소기업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강화
 - 「학연 교수제」와 학연 학생 제도 활성화를 지원하고, 출연금 중 일정비율(5~15%)은 중소기업 지원에 활용토록 의무화
- ③ 과학기술-인재-산업을 연계하는 지역과학기술혁신 체제 정비
 - 분산·다기화된 지역 과학기술 지원사업을 지역 특성에 맞게 체계적으로 배분하는 체계 구축(과학기술기본법 개정 검토)
 - 중앙정부 중심 지원에서 탈피, 지자체 스스로 지역내 산·학·연 자원과 기술혁신 수요를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역량 육성
- ④ 지역별로 특성화된 창업생태계 조성
 - 과기특성화대학은 과학벨트·연구개발특구 제도와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사업화 전진기지의 선도모델로 육성
 - 지역별 거점대학을 지역 출연(연)과 연계 운영을 통해 지역산업 기술 공급처로 육성

가. 과제개요

- 유망 서비스산업의 전략적 육성 등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통해 부가가치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확대
 - 제조업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해 국가 전체 성장동력을 견인

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) 서비스산업 행정지원 체제 구축, 지원근거 마련, 표준화 등 인프라 구축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추진
- ② (서비스산업발전 장단기 계획 수립) 서비스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 5개년계획 등 장단기 계획 수립
- ③ (유망 서비스산업* 집중 육성) 유망 서비스산업에 대해 산업별 집중육성대책을 마련하여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로 연결
 - 특히 유사 또는 이중 서비스간 결합, 융합 등 서비스 쏠분야에서 창조적 고부가가치화 추진
 - * IT·S/W, 연구개발(R&D) 서비스업, 컨설팅 등 사업서비스, 문화·콘텐츠 분야, 사회서비스, 보건·의료서비스 등
- ④ (서비스산업 허브화 추진) 녹색기후기금(GCF) 유치를 계기로 서비스산업 집중 육성을 위해 의료·관광·교육·MICE(Meeting·Incentives·Convention·Exhibition)·R&D 등 서비스허브화 추진

가. 과제개요

- 자본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통해 우리경제의 활력과 역동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와 시장규율 확립

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기업금융기능 강화) 혁신형 중소기업 등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,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지원 등을 위한 선진형 투자은행(IB) 육성, 조건부자본증권* 허용 등 기업자금조달수단 다양화

*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주식전환, 원리금상환 감면 등이 부여된 사채

- ② (투자자보호 강화) 개인의 합리적 투자를 위하여 투자자간 정보 불균형을 해소¹⁾하는 한편, 사전교육을 활성화하여 투자역량 제고 및 투자자 피해시 사후구제 강화²⁾

1) 공시정보 확대,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책임 강화, 투자유의사항 정보제공 확대 등

2) 소액사건 분쟁조정 진행중 금융회사의 소송제기 금지 등 분쟁조정제도 개선

- ③ (불공정거래규제 강화)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조사기능 확대 등 강제조사를 강화하고, 과징금제도 도입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유인 최소화 도모

- ④ (거래소 발전) 자본시장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개선¹⁾하는 한편, 시장별 특성 활성화 등을 통해 실물경제 지원기능 제고²⁾

1) 장외파생거래 중앙청산소, 증권시장 대체거래시스템 등 도입

2) 코넥스 신설, 유가증권·코스닥시장 진입·유지 부담 완화 등

가. 과제개요

- 높은 고용창출효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중소기업·유통산업·외국인투자 등을 일자리창출 주역으로 육성
 - 대·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, 외국인투자U턴투자 활성화, 산업R&D 사업화,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도입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

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동반성장 생태계 조성) 대기업·협력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성·기술력 제고, 임금격차(대기업의 51.9% 수준) 해소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
 - 동반성장 확산·공정거래관행 정착을 위한 2·3차 협력사 대금 지급 모니터링시스템 보급,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확대(1차 협력사 포함)
 - 성과공유제* 도입확인 기업을 지속 확대('12년 77개 → ' 13년 100개)하며, 중견·중소기업간 성과공유제 활성화를 적극 유도
 - * 성과공유제 : 대기업·협력업체간에 사전 약속에 따라 공동의 개선활동(R&D, 시장개척, 공정개선 등)을 수행하고 그 성과를 약정된 방식(단가 보장, 장기구매약정, 비용보전 등)으로 공유하는 협력활동
 - 대기업 비영리재단, 소셜벤처 등 기업의 공유가치창출(CSV) 활동을 활성화하여 기업경영·사회적 기여·일자리 창출을 연계
- ② (투자 유치) 외국인투자 조세감면, 입지지원, 현금지원 등 인센티브를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프로젝트 중심으로 개편
 - U턴기업 지원 법적근거 마련, U턴 유망업종 전용산단 조성, 공동 R&D센터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집단U턴 유치
 - 각 경제자유구역의 중점 유치업종별 산업특화클러스터 조성
 - 기존 외국인 부동산투자 이민제도 외에 금융상품으로 투자유형을 다양화하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도입
- ③ (선도자형 산업 R&D 및 사업화) 소재·장바·시스템·제품 생산기업이 공동 참여하여 새로운 가치사슬(Network형)을 만드는 R&D 프로젝트 발굴 지원 및 기술사업화·기술금융 활성화

가. 과제개요

- 개인정보 침해 정보에 대한 통신심의 축소, 산업 위축 규제 개선 및 인터넷 신산업 육성으로 최고의 인터넷 생태계 조성
-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통신심의 축소, 분쟁조정 기능 강화 및 규제 실태조사를 통한 산업 위축 규제 개선 등 추진

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) 개인정보 침해 정보에 대한 통신심의는 대폭 축소하되, 명예훼손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보완
 - 임시조치* 남용에 의한 표현의 자유 위축 방지(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신청권 신설, 임시조치 후 처리절차 마련 등)
 - *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가 명예훼손 피해자의 요청을 받아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게시 글을 안보이도록 하는 제도
 - 인터넷 피해구제 원스톱 서비스 센터를 구축하고,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역할을 확대하여 자율심의 기능 강화
- ② (인터넷 신산업 육성) 세계 최고의 인터넷 인프라 및 ICT 기술을 기반으로 클라우드,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 창출
 - 클라우드 발전법을 제정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한 정보 처리를 지원하고,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사업을 통하여 기반 조성
- ③ (산업 위축 인터넷 관련 규제 개선) 인터넷 관련 규제법령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실효성 없이 산업을 위축시키는 규제 폐지 등 개선
 - 인터넷 관련 규제는 다양한 부처 소관법률에 존재함을 감안, 규제개선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여 개선 추진

가. 과제개요

- ☐ 청년의 도전적인 해외진출 지원과 창직 활성화 등을 통해 청년의 일할 기회 확대

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K-Move) 「글로벌 스펙초월 취업시스템」을 구축, 열정·잠재력 있는 청년을 선발하여 전문가 멘토링·맞춤형 교육훈련 등을 통해 인재로 양성한 후, 해외진출 지원
 - 「K-MOVE 포탈」 구축·운영을 통한 현지 일자리 정보를 통합·관리하고, 이를 통해 원스톱 종합서비스 제공
 - 「해외취업장려금제도」를 통한 현지 정착 지원과 해외 벤처 캐피탈의 국내 지원 및 로스쿨생 등의 해외 법률분야 취업 지원
- ② (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창직 활성화)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청년 사회적기업가 양성 확대
 - 자치단체-지역대학-지역기업 등이 연계·추진하는 「우리지역 키우는 창직사업」 신설 및 창직인턴제 확대
- ③ (공공부문 청년층 일자리 확대) 교원, 경찰, 소방, 복지, 고용분야 일자리의 단계적 확대 및 청년 채용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

가. 과제개요

- 정부의 주요 정책과 사업을 일자리 관점에서 평가,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고용친화적 사업 활성화 및 고용률 70% 달성 지원

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고용영향평가 강화 및 활용도 제고) 주요 예산사업 등에 대한 고용영향평가 확대 및 사전 고용영향평가 도입 등을 통해 예산 편성·집행에 적극 활용
 - 단위사업 중심에서 산업별·정책분야별 평가로 확대하고, 지방 자치단체 사업이 고용친화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
- ② (일자리 중심 국정운영)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일자리 컨트롤 타워로서 ‘(가칭) 국민일자리행복회의’ 정기 개최
 - * “고용률 70% 달성”을 위해 향후 5년간 추진해야 할 청사진인 「국민 일자리 행복 로드맵」 수립·추진
 - 「일자리정책조정회의」를 통해 중앙과 지방의 쌍방향적 의사소통 체계 구축, 매월 지역·산업별 경기·고용동향 점검
 - 「민관 일자리협의회」를 통해 공공 및 경제 5단체간 경제·산업 동향과 고용창출에 관한 인식 공유·협력
- ③ (고용영향평가의 인프라 강화) 체계적인 고용영향평가를 위한 고용·노동통계 기능 강화 및 관련 인프라 보강
 - *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정밀조사 및 심층분석 등

가. 과제개요

- ☐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‘따뜻한 성장’ 과 ‘국민행복’ 실현

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협동조합 비전 및 정책 수립) 협동조합 발전 기본계획(‘14~’ 16년) 수립 및 기존 일자리, 복지정책과 연계성 제고 정책 과제 발굴
 - 법 시행후 실태조사를 통해 ‘협동조합 장기정책 비전’ 수립
- ② (협동조합 인프라 지원) 누구나 쉽게 협동조합을 설립·운영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 및 정책지원 강화
 - 권역별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조합설립, 인가, 감독업무 등 지원
 - 온라인 설립 신고 및 인가, 경영자료 공시 및 통계 DB구축 등을 위한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, 운영
- ③ (사회적기업 활동 지원) 사회적기업 활동범위 확대 및 인증제 개선
 -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기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‘사회목적 판단기준’ 보완 등 제도개선 (예: 인증제의 등록제 전환 등)
 - 인건비 직접지원은 단계적 축소, 사업개발· 판로개척 등 간접지원 확대 및 성과에 따른 지원방안 마련
- ④ (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업 지원 강화)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제 활성화, 농어촌 지역개발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
 -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, 청년·고령자의 사회적기업 취업·창업 지원 강화(예: 청년 사회적기업 인턴제, 은퇴자 창업전문과정 개설 등)

추진전략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강화

- (11) 정보통신 최강국 건설
- (12) 농림축산업의 신성장 동력화
- (13) 해양 신성장 동력 창출 및 체계적 해양관리
- (14) 수산의 미래 산업화
- (15) 보건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
- (16) 고령 친화산업 육성
- (17) 물류·해양·교통체계 선진화
- (18) 해외건설·플랜트 및 원전산업 진출 지원

가. 과제개요

- 콘텐츠(C)·플랫폼(P)·네트워크(N)·기기(D)를 아우르는 혁신적 정보통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보통신 최강국 건설

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네트워크)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ICT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세계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, 국민이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
 - 현재 보다 10배 빠른 1Gbps급 유선 인터넷을 보급하고, 무료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무선 인터넷존(Wi-Fi존) 대폭 확충
- ② (HW/SW) ICT가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ICT 중소기업의 창업과 기술거래를 활성화하고, 창의적인 기술이 해외에서 원활히 유통될 수 있도록 해외 기술거래 유통망 확보 추진
- ③ (플랫폼) 방송통신 융합추세에 대응하여 방송법·IPTV법 통합 등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를 추진하고, 맞춤형·양방향 서비스가 가능한 스마트 미디어 육성으로 신규 미디어시장 창출
- ④ (콘텐츠) 게임, 음악, 애니·캐릭터, 영화, 뮤지컬 등 5대 글로벌 킬러 콘텐츠를 집중 육성하고, 창의적 아이디어를 인큐베이팅하고 공동 창작할 수 있도록 콘텐츠코리아 랩 설립 등 추진

가. 과제개요

- 시장개방 확대, 사회·경영환경 변화 등에 대응, 농림축산업을 신성장 동력화하여 일자리 창출 및 부가가치 제고

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농식품의 6차산업화) 생산과 연계, 유통·가공·외식·관광 등 2·3차 산업을 활성화하여 농촌지역의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
 - 6차산업화 추진을 위한 규제완화로 가공·향토산업을 육성하고 마을공동체 중심으로 관광·체험 등 3차 산업화하여 농촌 관광·체험 활성화
- ② (농식품의 첨단산업화) 종자, 식품, 기자재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로 농식품을 최첨단산업으로 육성
 - 종자강국 도약을 위해 Golden Seed 프로젝트, 육종연구 인프라 구축 및 해외 로열티 절감 추진
- ③ (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) 분뇨문제 해결 및 생산체계 개선 등을 통한 축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추진
 - 가축분뇨 자원화, 무허가축사 개선, 시설현대화 지원, 장단기 사료가격 안정대책 및 가축질병 대응체계 강화 등 추진
- ④ (산림부국 실현) 숲 가꾸기, 목재산업 육성, 산림복지 공간 및 도시숲 확충, 산림탄소배출권 확보 등으로 산림가치 극대화

가. 과제개요

- 체계적 해양관리를 통해 해양주권을 강화하고, 해외 해양경제 영역 개척, 해양신산업 육성 등 신성장동력 창출

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해양신산업 육성) 마리나 시설 확충 등 해양관광 기반을 확대하고, 산업연계형 R&D 지원을 통한 성과 확산 도모
 - 마리나 체험행사 확대를 통한 해양레포츠 저변을 확대하고, 마리나 시설 확충, 마리나 서비스업 육성 등 마리나 산업 활성화
 - 해양바이오, 해양에너지·플랜트, 수자원 등 해양R&D를 지속 추진하되, 해양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확충
- ② (경제영토개척) 남·북극을 아우른 극지정책, 심해저 광구확보 추진
 - 남극 장보고기지 건설, 북극 항로개척 및 극지에서의 기초·응용 연구 확대 등 극지에 대한 전략적 개발·활용 추진
 - 유망 탐사개발광구 확대 및 선진국 수준의 상용화 기술개발
- ③ (해양관리) 주변국 동향에 적극 대응하고, 경계확정 지원 강화
 - 주변해역에 대한 해양관측과 조사활동을 강화하고, 해경 대형 함정 확충, 해경전진기지 개발 등 체계적인 해양관리 추진

가. 과제개요

- ☐ 피쉬플레이션 시대를 맞아 국민이 필요로 하는 신선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,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

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수산업의 미래산업화) 첨단기술 접목 및 신개념 도입으로 전 세계적 수산양식혁명을 선도하고, 외연 확대로 수산업 영역 확장
 - 유망품목에 R&D를 집중하고, 대단위 양식단지(양식섬), 먼 바다 외해양식, 도심형 빌딩양식, 갯벌양식 등 신개념 생산 시스템 확립
 - 바다생태관광·레저·스포츠 등으로 수산업의 외연 확장
- ② (지속가능한 수산업 실현) 수산자원 증강, 적정 어선세력 유지 및 해외개발역량 강화 등으로 수산물의 지속적 공급체계 구축
 - 바다목장·바다숲·종묘방류 등 자원조성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에너지절감형·복지형 어선 개발·보급 및 노후어선 현대화 추진
- ③ (어항 기능 고도화) 기능 융복합, 개발방식 다변화, 시설 개보수 및 관리강화 등으로 어항의 효용성 극대화
 - 맞춤형 특화어항 개발, 민자투자 활성화, 어항안전 보장 등 추진
- ④ (수산 식품산업 육성) 인프라 강화, 제도 개편 및 지원 강화로 수산물 소비패턴을 다양화하고 수출확대에도 기여
 - 수산식품 가공·소비지물류 센터 확충, 천일염의 세계화 등 추진

가. 과제개요

- ☐ 창조경제 이행을 위한 핵심산업으로 헬스케어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을 선점,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

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제약산업 글로벌 10대 강국 도약) ‘글로벌 제약육성 펀드’ 조성, 제약산업 해외진출 전문인력 양성, 제약산업 특성화 대학원 추가 지정, 기술투자 중심 전환을 위한 의약품 유통구조 선진화 추진
- ② (첨단의료기기, 화장품 산업육성) 융복합 신의료기기 R&D 강화,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지정 및 특성화 대학원 설립, 화장품 산업 첨단 수출 산업화
- ③ (신 의료·융합서비스 발전 기반 조성) 국가 보건의료정보 표준화, 의료정보 공유보호 제도 정비, 융복합 서비스(U-health, PHR) 등 시범사업 추진
- ④ (전략적 보건의료 R&D 강화) 보건의료 R&D 기본계획 수립 및 부가가치 높은 첨단의료기술 개발 분야* 집중 투자, 연구 중심병원 육성

* 맞춤형의료, 줄기세포·재생의료, 신약·의료기기, 양한방 융합 등
- ⑤ (해외환자유치 활성화) 중증장기 환자 유치를 위한 유치채널 다양화, 복합 헬스케어 타운 조성 지원, 해외환자 유치 전문인력 양성
- ⑥ (의료수출 촉진)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 펀드 조성, 의료법인 해외 투자 기반 및 병원수출 전문기관 설립·육성
- ⑦ (한의학 세계화) 국제특허·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전통지식 체계화, 한의학 해외 거점 마련 등 추진

가. 과제개요

- ☐ 고령화에 대응하여 건강 증진·웰빙 등 친고령산업 및 항노화 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

* (글로벌 항노화 시장) '10년 237조→ '15년 365조원 전망
(국내 항노화 시장) '11년 11.9조*→ '20년 28.3조 전망

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산업화 가능분야 개발) 항노화 화장품·의약품·식품, 고령자 복지형 헬스케어 융합제품·서비스, IT기반 스마트케어 기술 개발, 항노화 특화 글로벌 헬스케어 육성

- ② (친고령·항노화산업 R&D 확대) 범부처 ‘고령화 시대 고령친화 항노화 산업 Flagship프로젝트’ 추진, R&D 지원 확대*

* 복지수요대응(자동수욕시스템, 고령자 테크노하우스, 신체기능 대체물, 건강관리 등), 미래수요창출(인공지능 스마트신발, 고령생활지원 Health IT 시스템) 분야 지원

- ③ (융·복합 R&D 촉진 여건마련) 친고령산업 연구지원센터* (예: World Aging Center) 건립, 관련 펀드 조성 추진 및 전문인력 양성·자격제도 도입 및 국제행사** 유치 추진

* 분야별 글로벌 시장진출 Hub화, 융복합 신기술 및 다학제적 정책개발, 인력양성 (ODA 포함), R&D, 인큐베이팅, 시장활성화 등 지원

** 제3차 UN 세계고령화총회 등 정상급 국제행사 유치 ('15) 추진

- ④ (관련 법·제도 정비) ‘친고령·항노화산업 활성화 T/F’ 구성, 산업 발전 중장기 로드맵 및 항노화 산업 연구·육성 기반 마련

* 친고령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장기요양 급여 제품 수 및 급여 대상자 확대 병행

가. 과제개요

- 간선·대중교통체계 개선과 물류·해운·교통 신산업 육성 등으로
교통·물류·해양 체계 및 산업 선진화
- 기존 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, 지원체계 등을 정비
하여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 마련

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교통체계) 혼잡한 간선교통망과 도시권 철도·도로망을 개선
하고 교통 수요관리 및 대중교통 체계 선진화 추진
 - 철도 병목구간을 개선하고 혼잡권역 고속도로망 확충
 - 대도시권 광역철도 및 도시내 혼잡도로 개선사업 지원 확대
 - *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구축 추진 및 광역철도 국고지원비율 상향
 - 대중교통 노선·요금체계 및 고속도로 통행료 합리화
- ② (해운·물류) 해운·물류산업에 지원* 강화 및 국적 크루즈 육성,
다기능 항만클러스터 조성, 선박관리산업 육성 등 추진
 - * 해운보증 강화, 화주-물류기업 직접연결 등 제3자 물류기업 지원 추진 등
- ③ (해양개발체계) 해양생명자원 발굴, 자원통합관리 시스템 구축
등 해양개발을 체계화하고, 심층수 이용범위 확대 등 경제적
이용확산과 연계

가. 과제개요

- 해외건설·플랜트, 원자력발전소 등 건설·원전산업의 해외 진출 촉진을 통해 신성장동력 창출
 - 시장·공종 다변화, 지역별 수출전략 등 해외건설 5대강국 진입 기반을 마련하고, 발주제도 개선 등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

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해외건설 기반마련) 범정부적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고,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패키지형 수출, 해외건설 R&D 등 추진
 - 아프리카·중남미 등 새로운 해외 건설시장 진출을 확대하고, 정부 주도로 진행된 한국형 국토·SOC 개발경험 수출 노력
 - 금융지원 확대 등을 통한 중소기업 해외 진출 활성화
- ② (국내 건설제도 선진화) 해외건설의 토대가 되는 국내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해 공사 입찰방식 및 건설기능인 처우 개선 추진
- ③ (원전플랜트 수주 확대) 국가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·추진하고, 수주활동도 적극 지원
 - 대기업이 주도하는 플랜트수출 이외에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기자재 틈새시장 진출 역량 확대
 - 원전운영, 정비, 계속운전 등 서비스·기술시장에도 적극대응
 - * '13년 중 UAE 원전운영/정비지원계약 체결 추진
 - 미자립기술 국산화로 도입국의 기술이전 수요에 대응하고 원전 건설·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적기확보

추진전략 3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

- (19) 중소기업 성장 희망 사다리 구축
- (20) 중소·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
- (21) 창업·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
- (22) 소상공인·자영업자 및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
- (23) 영세 운송업 등 선진화

가. 과제개요

- ☐ 중소기업·중견기업 정책연계를 강화,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‘중소- 중견- 대기업’ 으로 성장하는 기업의 사다리를 복원하여 우리경제의 부흥과 일자리 창출

나. 주요 추진계획

①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

- (기술력 및 생산성 향상) 중소·중견기업에 대한 R&D 지원 확대, 출연연구소 예산의 중소기업 지원 쿼터제 도입, 정부 기술개발 결과물 중소기업 우선이전 법제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력을 선진국의 90%, 생산성은 대기업의 60%로 향상
- (수출 및 판로지원 확대) 중소기업 수출단계별(준비- 실행- 현지진출) 맞춤형 지원 강화, 강소기업에 대한 집중지원 프로그램 도입
 - 여성기업제품 구매의무화, 대규모 계약의 분할·분리발주 법제화, 소기업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 초기시장 제공
- (고질적인 인력난 완화) 중소기업 인력유입 및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재형저축 및 퇴직공제제도 도입, 병역특례제도 개선 등을 추진

② (중견기업 성장사다리 마련) 중소기업 졸업 후 금융·세제 등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, 가업상속 지원 강화 등 중견기업에 대한 정책지원을 확대하여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육성

③ (정책실효성 제고)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·운영을 통해 중복지원을 방지하고, 유형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정책 마련 및 정책홍보 시스템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개편

가. 과제개요

- 수출비중이 33%에 불과한 중소기업이 세계시장에 눈을 돌리도록 함으로써, 경제위기 극복, 일자리 창출 등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신성장동력으로 육성
 - ‘11년 무역 1조달러 달성, 수출 7강 진입 등 그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, 대기업특정 품목 편중, 가격경쟁력 위주 수출로 성장한계 직면
 - * 수출편중도(‘12): 주력 5대 품목(반도체, 자동차 등) 41.1%, 13대 품목 80%
 - 해외이전에 따른 산업공동화 우려, 선진국보다 미흡한 소재·부품산업 경쟁력, 중국 등 신흥국 추격 등으로 ‘샌드위치 경제’화
 - * 해외생산비중 : 휴대폰 81%(‘123분기 삼성·LG 등), 자동차 51%(‘12년 현대·기아)
- 이를 위해 중소기업 수출비중 제고, 품목 다변화 등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역량을 집중하고, 지원기관별 칸막이 제거를 통해 업종기업 성장단계에 맞춘 수요대응형 수출지원체계 구축

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중소·중견기업 역량별·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) 기업의 글로벌화 역량평가와 수출단계(준비-실행-현지진출)별 정책수요에 맞춘 수출지원 패키지 지원 및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지역전문가 양성
- ② (신흥시장 마케팅 지원 및 인프라 강화) 해외시장에서 문화한류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결합한 국가브랜드 제고 활동 추진 및 수출지원 인프라(해외전시회, 무역관, 무역보험 등) 확충
- ③ (총력 수출지원체계 구축) 지역별 원스톱 수출지원네트워크 구축 및 대통령 주재 무역진흥전략회의 개최 등을 통해 수출애로 해소
 - *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위해 KOTRA는 국내역할 강화, 중진공은 해외비 진출강화

가. 과제개요

- ‘창업→성장→회수→재도전’ 이 원활한 선순환 창업·벤처 생태계를 조성하여, 창조적 인재들이 도전하여 성공하는 영웅 신화를 창출

나. 주요 추진계획

① 창조형 중소기업 창출

- (우수한 청년창업가 발굴·양성) 기업가정신과 창업교육 강화, 창업선도대학 확대 등을 통해 대학의 희망 창업기지화를 추진하고 벤처 천억기업 등 성공사례를 홍보하여 젊은층의 도전정신을 고취
- (투자중심 자금조달체계 마련) 청년창업펀드 신설, 크라우드 펀딩* 및 보육·투자·기술개발을 연계 지원하여 성장시키는 ‘이스라엘식 투자시스템’ 을 도입하여 기술과 아이디어로 쉽게 자금조달 지원

* 일반국민으로부터 소액의 자금을 모집하여 창업에 투자

- (중간회수시장 확충 및 코스닥시장 개편) 엔젤지원형 세컨더리 펀드 확충,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, M&A 세제지원 및 코스닥시장의 기술기업 중심 개편 등을 통해 투자자금의 조기회수 통로 마련

② 원활한 재도전 환경 조성을 통한 실패경험의 사회적 자산화

- 실패해도 생계는 유지토록 압류재산 면제범위를 확대하고 ‘간이회생제도’ 를 도입하여 회생기간을 단축
- 실패 기업인이 과거 납부한 세금실적을 반영하여 체납된 세금의 납부유예 또는 재창업시 소득세·법인세 일부 감면 추진

가. 과제개요

- ☐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은 보호와 자생력 제고를 통해 경영여건을 개선하여 생업안전망 구축 및 서민경제 활성화

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자영업자·소상공인의 준비된 성공창업을 위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
 - (1단계 : 진입) 상권정보시스템*의 상권정보 제공기능을 강화하고, 프랜차이즈협회, 소상공인 창업학교를 통해 맞춤형 특화교육 실시
 - * 전국 1,200개 주요상권의 동종·경쟁업소, 임대시세, 유동인구 등 정보 제공
 - (2단계 : 진입 후) 사업보호와 경영역량을 강화
 -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의 조기 정착, 사업조정 일시정지 명령제 도입 등을 통해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 억제
 - 협동조합 결성을 통한 공동구매, 지역별 유통물류센터 건립 확대 등을 통해 싸게 사서 싸게 파는 가격경쟁력 확보 지원
 - 소상공인지원공단, 소상공인기금 설치 및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정을 통해 소상공인에 종합적인 통합지원체계를 구축
 - (3단계 : 실패) 업종전환·전직교육을 강화하고, 폐업시 압류걱정 없이 생계유지·재기가 가능하도록 소상공인 공제기금 조성 확대
- ② 고객이 다시 찾는 활기찬 전통시장 육성
 - 상인조직을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, 다량엽가의 공동구매를 지원하고, 정부 비축물자 지원을 통해 가격경쟁력 확보
 - 지역 역사문화관광 등과 연계한 특성화시장 육성을 확대하고, 전통시장 인증제도 도입, 시설현대화사업 상인부담 완화 등 추진
 - 온누리상품권을 5년간 4조원을 발행하고, 지자체 공무원도 복지비의 10%(400억원)를 구매, 주차장·택배시스템·카드단말기 보급 확대

가. 과제개요

- 교통·운송 산업을 지원하고, 교통산업 구조를 선진화
 - 택시, 버스, 화물차, 연안여객운송 등 영세 운송업을 지원하고, 교통·운송 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제고

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택시지원) 택시문제의 근본요인인 ‘과잉공급’ 문제를 해소하고, 연료다변화 지원 등으로 경영수지 개선 및 경쟁력 제고
 - 택시총량 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한 감차보상과 CNG 등 차량연료 다변화를 위한 국가 지원 추진
- ② (버스산업 선진화) 정기이용권버스 등 수요응답형 서비스 도입, 광역급행버스 확대, 승차권 발매 통합전산화 등 경쟁력 강화
- ③ (화물 운송업 지원) 통행료 할인 검토 및 검사수수료 절감을 추진하고, 복지사업 및 휴게시설 확충 등 근로여건 개선
 - 표준계약 정착을 위한 모니터링 실시
- ④ (연안여객운송사업 선진화) 도서교통 육성 법률 제정, 국가고속 해상교통망(KVX)구축, 해상교통인프라 개선 등 도서교통 육성

추진전략 4 창익과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

- (24) 국가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
- (25) 우주기술 자립으로 우주강국 실현
- (26)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국가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
- (27) 지식재산의 창출·보호·활용 체계 선진화

가. 과제개요

- ☐ 기술과 지식, 아이디어가 활발히 창출되고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·활용될 수 있도록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을 제고

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창의적 상상력이 풍부한 사회문화와 융합형 과학기술인재 양성
 - 상상·도전·창업 국민운동과 전국 과학관 무한상상실 설치 등 상상력과 아이디어의 씨앗이 퍼지도록 과학문화 활동 다변화
 - 과학기술 특성화대 융합교육 프로그램 지원, 과학고·영재고의 교육·연구 지원을 통한 과학영재 체계적 육성 등
- ② 국가R&D 투자규모 확대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투자전략 정비
 - 정부의 투자는 기초연구에 집중('17년까지 전체투자 중 40%)하고, 연계·사업화연구와 중소·중견기업R&D에 대한 지원 강화
 - 민간 R&D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, 기술규제 완화 추진
- ③ 창의적 성과 도출을 위해 R&D기획·평가 및 관리 시스템 개편
 - 최종목표와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구자가 자율 기획하는 방식을 적극 도입하고, 학술성과 중심 평가에서 기술이전 등 사업특성에 따른 다양한 가치를 평가요소로 반영
 - 정부R&D성과정보 시스템 구축과 후속연구 지원 등 성과활용 강화
- ④ 과학기술인이 신명나게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조성
 - 출연(연)별 미션 재정립과 중장기 비전수립, 출연금 지원비중 확대('14년 70%)와 총액인건비제도를 활용한 정규직 확대 추진
 - 과기인 연금을 사학연금 수준으로 높이고, 65세 정년 환원 검토
- ⑤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기획인프라 강화
 - 창조경제 구현 위해 과기기본법 범위를 혁신생태계까지 확장
 - 과기기본계획의 실효성 제고위해 부처별 추진계획(5년) 수립

가. 과제개요

- 발사체, 인공위성, 달 탐사 등 최첨단 집약기술인 우주기술의 자립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국민의 삶 구현

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한국형 발사체 개발을 통한 인공위성 자력발사 능력 확보
 - 1.5톤급 실용위성을 지구저궤도(600km ~ 800km)에 발사할 수 있는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여 발사체 개발(당초 ‘21→ ’ 19)
 - 한국형발사체를 활용, 달 궤도선과 달 착륙선 자력발사(’ 20)
- ② 인공위성 개발로 국가안전과 대국민 서비스 강화
 - 한반도 주변의 기상, 해양, 환경, 재해재난, 자원 등 상시관측 체제를 구축하여 국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 구현
- ③ 우주산업 육성을 통해 창조경제 구현에 기여
 - 한국형발사체는 시스템 예비설계 단계부터 항공우주연구원과 기업체가 공동 추진하여 우주산업 촉진
 - 차세대 중형위성개발사업 등을 통해 공공서비스 창출, 위성전문 기업 육성, 세계 위성체·위성영상 시장 진입 등 도모
 - 국내 위성영상 판매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위성영상 수신·활용 등 위성활용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
- ④ 우주 국제협력 강화로 우주개발 촉진 및 국가위상 제고
 - 대상국 수준과 특성을 분석하여 협력을 다변화하고, 높아진 우주 개발 역량에 걸맞는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강화
 - 관계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대형 국제공동연구 사업 등 다자간 협력 프로그램 참여 확대

가. 과제개요

- 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구개발특구를 연계하여 기초과학부터 첨단 비즈니스를 연결하는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

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과학벨트와 연구개발특구 연계로 전주기 R&D 지원 체계 구축
 - 그간 분산 추진되어온 정부지원체계를 일원화하여 기초과학에서 연구성과의 사업화까지 일괄 지원
 - 현지 전담 지원조직을 일원화하고, 과학벨트·특구 내 연구기관의 성과 발굴·확산과 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
- ② 과학벨트를 과학·문화·산업이 융합되는 지식생태계로 조성
 - 기초과학연구원은 인근 대학연구소, 기업체와의 소통과 융합의 중심기관이 될 수 있도록 열린 공간으로 건립
 - 유치한 과학자와 가족을 위한 정주여건(문화·의료·교육 등) 조성
- ③ 기능지구(청원·천안·세종)의 과학-비즈니스 연계역량 강화
 - 기능지구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고, 지역별 특성에 따라 거점 지구와의 연계전략을 차별화
 -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위한 지역별 역량 육성 및 기반 마련
- ④ 기초과학연구원을 창의인재와 원천지식의 중심기관으로 육성
 - 국내 보유 역량과 국가 전략적 차원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, 중장기 연구 분야 구성에 관한 계획 수립
 - 각 캠퍼스는 지역별 특성화된 기초연구 거점으로 조성

가. 과제개요

- ☐ 지식재산이 효율적으로 “창출-보호-활용” 될 수 있는 지식재산 (IP) 시장생태계 조기 구축

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IP 가치평가 및 금융 활성화 등 지식재산 활용 극대화
 - 연구개발-표준-특허 간 삼각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장성이 큰 고부가가치 원천·표준 특허의 전략적 확보 방안을 마련
 - 지식재산서비스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(KSIC) 독자 산업 반영 등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육성 기반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
- ② 지식재산 권리구제 실효성 확보 및 침해대응 강화
 - 신속·전문화된 분쟁해결을 위해 특허소송 관할제도 개선 및 소송대리 전문성 강화 방안 마련
 - 디지털 포렌식 등 지재권 침해에 대한 수사기술 고도화 및 특사경 등 수사인력 전문성 제고, 기관 간 정보공유 등 협력 강화
 - 해외 지원센터 연계·확충 및 국제협력*을 통한 침해방지 및 권리구제 지원
- ③ 중소·중견기업 지재권분쟁 대응역량 강화
 - 중소·중견기업의 지재권 관리역량 제고를 통한 선제적 분쟁예방 지원
 - 국제지재권 분쟁 단계별(평시-경고-대응) 범정부적 맞춤형 지원체계 운영
- ④ 정당한 지식재산 보상체계 확립 및 국민인식 제고
 - 기업·대학·연구기관 등의 종업원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혁신과 창의 촉진

추진전략 5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

- (28)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
- (29) 소비자 권익보호
- (30)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집행 체계 개선
- (31) 대기업 집단 지배주주의 사익편취행위 근절
- (32) 기업지배구조 개선
- (33)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 기반 구축

가. 과제개요

- ☐ 대기업의 경제력 우위를 남용한 각종 불공정행위와 중소기업·소상공인의 사업영역 침범으로부터 경제적 약자를 보호

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유통분야 제도 개선과 불합리한 거래관행 조사·제재
 - 납품업체로부터 징수하는 복잡다단한 판매장려금 항목 정비·개선
 - 판촉사원 파견의 요건을 명시한 가이드라인 제정·보급
 - 각종 비용의 합리적 부담기준 제시를 위한 표준계약서 개정 추진
- ② 가맹점주 권리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실태조사 등 강화
 - 가맹본부의 매장 리뉴얼 강요금지와 리뉴얼 비용분담(최대 40%)
 - 가맹점주의 단체 결성·가입에 대한 가맹본부의 불이익 부과 금지
- ③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피해 방지
 - 「하도급법」에 부당한 특약을 전면 금지하는 조항 신설
 - 중기조합에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 부여 방안을 추진
- ④ 대·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문화 확산
 - 1차 협력사와 2·3차 협력사의 공정거래협약 체결 유도·확산
 - * 1차 협력사와 2·3차 협력사간 거래내용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
 - * 2·3차 협력사까지 현금결제가 이루어지도록 유도
- ⑤ 중소기업 적합업종 확대 및 적합업종 관련 사업조정의 실효성 제고
 - 생계형 서비스업의 적합업종 조속 지정 및 지정범위 확대
 - 적합업종 사업조정을 2개월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는 신속사업조정제 도입

가. 과제개요

□ 소비자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와 불공정행위 규율을 통해 소비자 권익증진과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 유도

- *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지원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
- * 금융제도와 관행을 획기적으로 정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
- * 서민생활 밀접분야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적극 적발·제재

나. 주요 추진계획

① 소비자 역량강화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

○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에 필요한 정보제공

- * 매월 1~2개 품목의 가격과 품질을 종합적으로 비교한 정보 제공
- * 유통 채널별·단계별 가격정보, 소비자의 실제 구매경험에 기초한 상품정보 제공

○ 표시광고법에 동의의결제 도입

○ 소비자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소비자보호기금을 설립하여 운영

②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

○ 「금융소비자보호법」 제정안의 조속처리 추진

○ 신용조회회사가 희망자에게 개인 신용등급 변동사항 통지 서비스 제공

③ 서민생활 밀접분야 담합 등 불공정행위 시정

○ 생필품, 금융, 교육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 모니터링 지속 실시

○ 재정낭비를 초래하는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 및 제재 강화

- * 정부 및 공공기관 발주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입찰상황판 등 정보 수집 채널 정비

가. 과제개요

□ 법 위반 억지 및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를 위해 공정거래 관련 법 집행체계 대폭 개선

- * 소액다수 피해가 큰 위법행위 유형에 대해 집단소송제 도입
- * 악의적이고 피해정도가 큰 위법행위 유형에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
- * 위법행위의 직접 금지(중지)를 법원에 청구하는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
- * 공정거래사건에 대한 '고발요청권자'를 중기청장·감사원장·조달청장으로 확대

나. 주요 추진계획

① (징벌적손해배상제) 하도급법 상 '부당단가인하, 부당한 발주 취소, 부당반품'에 우선 도입하고, 점차 도입범위 확대 추진

- * 현행 「하도급법」 규정 및 외국 사례를 고려, 징벌적 배상금액 상한을 3배로 규정

② (집단소송제) 공정거래법상 담합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도입

- 판결의 효력범위와 관련하여 명시적인 제외신청을 하지 않은 모든 피해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'Opt-out(제외신청형) 방식' 추진

- *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“증권관련집단소송법상”의 자격요건 및 허가요건 등 완화(법원의 변호사 보수 감액권한, 집단소송 대리횟수 제한 등)

③ (사인의 금지청구제) 「공정거래법」 위반행위 전체에 대해 도입

- 종국적인 금지명령 이외에도 예방적 금지명령이 가능하도록 규정

- * 남소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권한을 규정

④ (전속고발제 폐지) 「공정거래법」 및 「하도급법」 위반에 대한 고발 요청권한을 중소기업청장, 감사원장, 조달청장에게도 부여

- * 해당 기관이 고발 요청할 경우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고발

가. 과제개요

- ☐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일감몰아주기 등 불법 사익편취행위를 규율하고 부당이익을 환수

나. 주요 추진계획

①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사익편취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보완강화

-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금지규정 추가 신설
 - *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규제를 위해 「공정거래법(제3장)」에 규정 신설
 - * 이익을 본 총수일가에게도 직접 과징금을 부과하여 부당이익 환수
- 현행 부당지원금지 규정 강화
 - * 부당지원행위의 위법성 성립요건을 현행 ‘현저히 유리한 조건’에서 ‘현저히’를 삭제하거나 ‘상당히’로 완화
 - * 수혜자에게도 부당지원을 받지 않을 의무를 신설하고 위반시 제재
 - * 부당지원의 한 유형으로 통행세 관행을 신설하여 제재
- 대기업집단 현황공시가 사익추구에 대한 경보장치로 작동되도록 개선
 - * 비상장계열사의 총수일가 지분율, 영위업종, 내부거래비중 추이 등을 분기별로 공시

② 지배주주 등의 횡령, 사면권 상신, 회계부정행위에 대한 법집행 강화

- 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」상 횡령 등에 대한 형량 강화
 - * 대형 경제비리 사건에서 검찰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판결 선고시 원칙적으로 항소
- 「사면심사위원회」등을 통해 대기업 지배주주·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하여 사면권을 엄격하게 상신(13~17년 지속 시행)
- 회계부정행위 등 기업비리에 대한 처벌 강화(구형 및 항소기준 상향)
 - * 회계부정사건에서 검찰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원칙적으로 항소

가. 과제개요

- ☐ 대기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지배력 유지·강화의 원인이 되는 소유·지배구조의 투명성·책임성을 제고

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대기기업집단 계열회사간 신규 순환출자 금지 조항 신설
 - 기존 순환출자고리 강화를 위한 추가출자도 신규순환출자로 간주하여 금지
 - 기존 순환출자의 자발적·점진적 해소 유도를 위해 공시의무 부과
- ② 대기기업집단 지배시스템 개선
 - 감사위원을 맡을 사외이사는 다른 이사와 분리·선출하는 방안 마련
 - 집중투표·전자투표를 의무화하되, 일정 상장사부터 우선 실시
 - 「금융회사지배구조법」 제정을 통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
- ③ 독립성 강화를 전제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
 -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를 개선하고, 대표소송제기권 등 주주권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한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사
- ④ 금산분리 강화
 -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되, 일정요건 충족시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 의무화
 - 금융보험사 보유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강화
 - *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실태를 기업집단현황 공시항목에 추가하는 방안 추진
 -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 축소를 위한 「은행법」 등 개정

가. 과제개요

- ☐ 금융부문의 규제·감독체계를 개선하여 금융시장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보호를 강화

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상호금융) “상호금융정책협의회*”를 통해 관계기관간 정책 공조를 강화하고, 각 중앙회의 조합감독 업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‘동일기능에 대한 동일규제’ 원칙 확립

* 금융위(원), 농식품부(수협), 행안부(새마을금고) 등 참여('13년 1월 기발족)

- ② (유사보험) 우체국, 새마을금고, 수협, 신협 보험부문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민영보험사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도록 관련법규 개정(한미FTA 협정사항)

- ③ (펀드) 자본시장법 적용이 일부 배제·완화되고 있는 개별법 (14개)상 펀드에 대해서도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 추진

- ④ (우체국 예금) 우체국과 민간금융회사간의 불공정경쟁*으로 인해 우체국으로의 예금 쏠림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·추진

* 우체국금융은 지급준비금·예보료·법인세 면제, 예금 전액보장 등 영업조건이 민간 금융회사보다 유리

추진전략 6 | 성장을 뒷받침 하는 경제운영

- (34) 대외 위험요인에 대한 경제의 안전판 강화
- (35)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 대응
- (36) 부동산 시장 안정화
- (37) 물가의 구조적 안정화
- (38) 안정적 식량수급 체계 구축
- (39)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
- (40) 건전 재정기조 정착
- (41) 공공부문 부채 및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

가. 과제개요

- 대외부문의 충격에 대한 우리경제의 대응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창조경제의 기반 구축
- 글로벌 금융·재정위기가 상시화된 상황에서 대외 충격이 국내 경제로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·효과적으로 차단할 필요

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) 외국인 증권투자 등 해외 자본의 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
 - * 해외자본 유출입 확대는 국내 금융·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야기하고 대외 건전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
 -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선물환포지션, 외환건전성부담금 등 기존제도의 효율, 부과방식 및 부과상품 조정
- ② (외채·외화유동성 관리) 외채의 만기·총량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, 외환보유고 등 공공·민간부문의 외화유동성을 적정수준으로 유지
 - 외채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, “국내(domestic)-동아시아(regional)-글로벌(global)” 3단계 금융안전망 강화
- ③ (외환건전성 제고) 외환·금융시장의 주요 참여자인 금융기관의 대외 리스크 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은행 등의 외환건전성 제고
- ④ (국가신용등급 관리)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에 대한 척도인 국가신용등급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

가. 과제개요

- 글로벌 재정위기 및 국내외 경기둔화 지속 등 경제·금융 여건불안에 대응하여 금융시장 안정을 최우선적으로 도모

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가계부채 연착륙) 가계부채 규모, 증가속도, 대출구조 관리* 등 그동안 누적된 가계부채문제가 연착륙되도록 정책적 노력 경주
 - *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(일시상환, 변동금리, 거치식 → 분할상환, 고정금리, 비거치식)을 당초 목표('16년말까지 30%비중)대로 차질없이 추진
 - 상호금융, 보험사 등 가계대출 규모가 큰 제2금융권의 대출 증가속도와 건전성을 면밀히 점검
 - 금융권 자체적으로 채무조정 등을 통해 차주의 상환부담 경감 노력을 지원하도록 유도
- ② (회사채시장 원활화) 취약업종 및 비우량등급 회사채 시장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고, 회사채 발행 인프라관련 전반적인 제도개선도 추진
- ③ (상호금융·저축은행 건전한 발전) 상호금융의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, 저축은행의 건전경영 유도를 통한 신뢰회복
 - 조기경보시스템(EWS, Early Warning System)을 통해 수신급증 등 '중점관리조합'에 대한 관리 강화(금감원이 중앙회 직접 검사 등)
 -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해서도 직접 검사를 실시하고, 편법적 우회대출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등 건전경영을 위한 기반 마련

가. 과제개요

- ☐ 집값 하락, 주택거래 위축 등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실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주택·부동산 시장 안정화 추진

나. 주요 추진계획

*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 범 정부 대책을 마련중

① 부동산규제 정상화

-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여 부동산 시장 정상화 추진

② 주택수급 조정

- 공공주택 공급은 임대주택 위주로 전환하고, 분양주택 공급은 주택시장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
- 주택시장 매물을 흡수하고, 부족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세제 혜택 등 민간 임대사업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

③ 주택 수요 및 거래 회복

- 하우스·렌트푸어 대책을 적극 실시하여 한계선상의 서민·중산층을 보호하고 주택시장 안정화 추진

가. 과제개요

- 물가안정기조가 구조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안정화 방안을 강구하여 서민생활 안정 기반 마련
- 물가의 거품을 제거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차단하여 선진국 수준의 2%대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

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농산물 유통구조개선) 유통단계 축소, 유통경로간 경쟁촉진, 유통체계 효율화 등을 통해 구조적 수급안정 기반 마련*
 - * (유통단계 축소) 직거래 · 사이버거래 · 소비자참여형 거래 활성화
(경쟁촉진) 농협계통 출하 및 판매 확대
(유통체계 효율화) 도매시장 거래제도 다양화, 물류효율화, 비축확대
- ② (석유·통신시장 경쟁촉진) 알뜰주유소 확대, 혼합판매와 유류 공동구매 활성화, 전자상거래 시장 정착 등 석유시장 경쟁촉진
 - 알뜰폰서비스 활성화, 중저가 단말기 출시 확대 유도 등을 통해 통신요금 경쟁촉진 및 단말기 가격인하 유도
- ③ (공공요금 투명성 제고)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과 원가정보 공개 체계화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원가검증 시스템 구축을 통해 요금 투명성 제고
- ④ (정보공개 확대) 옥외가격표시제 단계적 확대, 가격·품질 비교 정보 공개 강화, 소비자단체의 원가 분석 기능 보강

가. 과제개요

- 국내 생산기반 확대를 통해 자급률을 제고하고 식량위기 사전 대응시스템을 확립하는 한편, 자주율 개념을 도입하여 해외 개발·비축 등 안정적 해외공급기반 구축

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위기상황별 대응 모델) 식량안보 모니터링 강화 및 조기경보 시스템 등을 통해 식량위기 사전대응 시스템 마련
- ② (우량농지 확보 및 농지 활용율 제고) 식량작물 재배에 필요한 우량농지를 최대한 보전하고, 겨울철 이모작 가능한 논을 대상으로 밀, 보리, 사료작물 등 재배 유도
 - 농지매입비축사업 및 우량농지 보전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,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 조정 등 추진
- ③ (곡물 수급불안 대응) 주요 곡물의 자주율 목표 설정 및 국내·외 비축 확대
 - 밀, 콩, 옥수수 등 주요 곡물의 자주율 목표치를 설정하고 국내 공공비축 대상을 현행 쌀에서 밀, 콩 등으로 확대
- ④ (해외에서 적기·적량 공급) 해외농업개발 투자 촉진, 국가곡물 조달 시스템 구축을 통해 해외 곡물확보 및 도입 역량 강화
- ⑤ (수산물 확보) 연근해어업 자원관리형 감척, 해외어장 개척 등을 통해 수산물 생산능력을 높이고, 비축확대 등으로 수급 관리 강화

가. 과제개요

- 중산·서민층 지원과 성장잠재력 확충 등을 위한 재정지출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공약이행 소요재원을 차질없이 마련하기 위하여 세입기반 확충

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비과세·감면제도 정비) 일몰이 도래하면 원칙대로 종료
 - 꼭 필요한 경우에는 까다롭게 검토해서 도입
 - 일몰을 대비할 수 있도록 일몰종료를 사전에 충분히 홍보
- ② (금융소득과세 정상화) 과세형평 제고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금융소득과세 정상화
 -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(4천 → 2천만원)
 - 주식양도차익 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
 - 비과세·감면 금융상품의 조세지원 한도 신설
- ③ (합리적 세부담 수준 결정) ‘13년 중 조세개혁추진위원회, 국민대타협위원회 논의를 거쳐 세입확충의 폭·방법에 대한 합의 도출

가. 과제개요

- 낭비성 예산의 제거, 비효율적인 세출의 구조조정 및 투명한 나라살림으로 국민부담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공약추진에 필요한 자원 확보에도 기여
- 나아가 재정수지, 국가채무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여 확고한 건전재정 기조의 정착 및 재정의 중장기 지속 가능성 확보

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예산낭비 최소화 및 재정평가 활성화) 예산낭비의 사전예방과 공공사업에 대한 조사·관리·평가 활성화로 지출 효율화 도모
 - 예비타당성조사, 재정사업 성과평가, 민투 적격조사,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 재정/공공사업 투자관리에 대한 종합적 지원체계 기능 통합
- ② (세출구조조정) 재원마련 및 효율적인 세출구조를 위해 제로 베이스에서 강력하고도 체계적인 세출구조조정을 추진
 - ‘재정구조개편추진위원회(가칭)’를 구성하여 경제분야 재량 지출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및 의무지출에 대한 효율화 추진
- ③ (중장기 재정운용 목표 제시 및 관리) ‘13~ ‘17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을 통해 중장기 재정운용 목표를 제시*하고 건전 기조 견지
 - * 향후 5년간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관리 목표 제시
- ④ (재정위험 모니터링체제 마련 운영) 국가부채로 전이될 수 있는 잠재·우발적 재정위험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위험요인에 선제 대응
 - 재정위험 요인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핵심지표별 임계치와 가중치를 검토하여 통합 재정위험지수를 마련·활용

가. 과제개요

- 향후 복지지출 증가 가능성, 공기업 부채 수준 등을 감안하여 공공부문 전체의 부채 관리체계 마련
- 이와 함께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국유재산 관리 패러다임 변화 (유지·보존 중심→개발·활용 중심) 등 정책환경에 부응하여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

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공공부문 부채 종합관리시스템 구축)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넓은 의미의 부채를 체계적으로 분류·공개·관리
 - 최근 IMF가 공표한 ‘공공부문 부채 작성지침(‘12.6월)’을 토대로 공공부문 부채를 작성하여 공개
 - 국·공채, 연금충당부채, 보증채무, 공기업 부채 등 부채 항목별로 차별화된 공공부문 부채 종합관리방안 마련
 - 특히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자산 2조원 이상 공공기관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실효성 제고
- ② (국유재산 관리의 효율화) 국유재산관리업무의 전문성·효율성 제고를 통해 재정수입 확보
 - 통합적인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 유관 시스템 및 DB를 상호 연계하고 새로운 IT기술을 활용하는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·운영
 - 국유재산 양여시 기획재정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의무화, 국유재산 특례 일몰제 도입 추진 등 국유재산 유상사용원칙을 대폭 강화
 -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 추진 등을 통해 국유지의 적극적 개발 및 매각 활성화 추진